코로나에 일회용품 쌓이는데…명절 선물 과대포장 여전

광주지역 설 선물세트 살펴보니

샤인머스캣 세 송이 포장에 비닐·스티로폼·박스 등 겹겹이 육류·어묵 등 과다포장 수두룩

광주 재활용쓰레기 급증 속 친환경은커녕 재활용 조차 안돼 "포장 간소화 해주오" 국민청원도

"폐기물 늘리는 과대포장 안돼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환경부가 낸 보도자료 제목이다. 과대 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점검한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추석 때는 '환경부 장관, 대형마트에서 과대포장 현장점검'이라는 제목으로 유통·제조·수입업계 등 10개사, 식품기업 23개사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과도한 포장재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자료까지 내놓은 바 있다.

과연 달라졌을까. 광주지역 백화점과 대형 할인매장, 농산물 직판장·전통시장 등이 취급하는 상당수 설 명절 선물세트 제품들은 여전히 과대 포장된 채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유통업체 스스로가 밝힌 취지를 찾기 어려웠을 정도다.

6일부터 이틀 간 둘러본 광주지역 백화점, 대형유통할인매장,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내놓은 설 명절 선물용품의 경우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포장이 과하다는 지적을 받을만했다.

소비자의 시선을 끌겠다는 데 맞춰지다보니 여러 차례에 걸쳐 꾸며지고 감싸져 있는 게 대부분이었고 친환경 포장재는 커녕, 재활용조차 되지 않는 소재로 포장된 게 많았다.

7일 오전 찾은 광주시 서구 대형마트 과일코너에는 내용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게 포장된 선물세트가 많았다.

5만원대 가격이 붙은 샤인머스캣의 경우 손바닥(가로 15㎝·세로 20㎝)만한 샤인머스캣 세 송이가 전부였지만 포장 박스는 두 세배 이상 컸다. 상품가치를 높이려다보니 하나씩 비닐 봉지에 담고 다시 스티로폼으로 감싼 뒤 푹신한 종이들을 넣은 커다란 박스에 담아내놓는 형태였다. 박스를 제외한 비닐봉지, 스티로폼, 잘게 잘려진 종이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다.

광주지역 한 백화점에서도 과하게 포장된 선물세트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지하 식료품 매장에서 판매 중인 어묵 선물세트의 경우 과하게 보여지는 포장재와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 소재들로 가득했다.

사각 나무상자 위에 쇠로 된 철판을 깔고 그 위에 진공포장된 어묵들을 놓은 뒤 다시 투명 필름으로 감싸고 목재 뚜껑으로 덮은 뒤 부직포 가방에 담아 판매된다.

환경부는 명절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토록 하고 있지만 언뜻 이같은 기준을 벗어나는 듯한 선물세트도 눈에 띄었다.

전통시장도 비슷했다. 친환경 포장재를 찾아 볼 수 없었다.

10년째 말바우시장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한 상인은 "무엇이 친환경 포장재인지 조차 모를 뿐더러 5~6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도 가격 때문에 잘 나가지도 않는데, 친환경 포장재로 바뀌면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절 대표적 가공 통조림 판매업체가 과도한 포장재 줄이기에 동참, 뚜껑 없는 통조림 선물세트를 내놓을 것이라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추석 때만 해도 과도한 포장재 줄이기에 나서겠다고 했던 업체들의 동참 의지도 퇴색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대통령님 명절선물 포장을 간소화해주세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소비자는 예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제품에 눈이 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일회용품의 사용 증가와 함께 쓰레기 펜데믹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증가해야 한다"며 "기업들도 앞장서 재사용, 친환경 소재를 포장재로 사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에서 하룻동안 발생하는 재활용쓰레기는 지난 2019년 83.3 t 에서 지난해 98.5 t 으로 18.2% 증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월출동의 재활용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직원이 선별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압착하고 있고(위), 야적장에는 선물을 포장한 스티로폼 쓰레기들이 산처럼 쌓여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밀려드는 생활쓰레기 산처럼 수북이 쌓여 "재활용 비율 낮아 처리 비용만 늘어" 한숨

광주 북구 재활용 수거업체 가보니

7일 오후 찾은 광주시 북구의 한 재활용 수거업체 직원들은 일요일임에도 분주했다.

직원들은 "미리 야적장을 비워 놓지 않으면, 설 명절이 끝나고 밀려 들어올 생활 쓰레기들을 쌓아 놓을 곳이 없다"고 말했다.

업체 야적장은 이미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배출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설 명절 쓰레기 급증에 대비해 비상 근무까지 할 형편이라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설 명절용 선물세트로 쓰레기 양이 예전보다 늘었다"면서도 "재활용이 되는 비율이 낮다 보니 폐기물쓰레기 처리 비용만 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친환경 포장재 비용을 늘려 과대 포장을 줄이자는 정부 호소에도 정작 현장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만했다.

야적장에는 이미 과일, 식용유, 참치 등을 담았었던 박스와 부직포 가방들로 가득했다. 어패류와 육류를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스티로폼도 15 t 트럭 적재함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설 선물 포장세트 중 여러가지 플라스틱이 섞인 혼합 재질 포장재의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한데도, 이같은 포장재를 사용한 설 선물세트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업체측 설명이다.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은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부쩍 늘어난 상황으로, 지난해만 해도 2421 t (1월)→2467 t (2월)→2875 t (4월)→2913 t (6월)→3029 t 등으로 증가세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 포장을 간소화한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해 유통하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업체 관계자는 "설 선물세트 중 특정 통조림과 즉석밥 선물세트에 쓰이는 포장재들은 절반 이상이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이라며 "설 명절 이후 쓰레기의 30%가 명절 선물 쓰레기"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출 요청하며 금융기관 직원에 준 소고기 12㎏은 어디로?

A씨 "3㎏ 박스 5개 15㎏ 전달" B씨 "박스 1개 분량만 받았다" 정육점 주인·택배기사 증언 토대 소고기 준 A씨 원심대로 벌금 50만원 B씨도 유죄…벌금 100만원 선고

금융기관 직원에게 담보대출을 더 받게 해달라며 건넨 소고기 12㎏는 어디로 갔을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 등)로 기소된 A(여·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순천 모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 B씨에게 땅을 담보로 되도록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31만원 상당의 소고기와 누룽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애초 A씨에게는 150만원 상당의 소고기(15㎏)와 10만원 상당의 누룽지(10봉지)를 건넨 혐의가 적용됐었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직접 고소한데다, 음식점 운영자를 통해 정육점에서 150만원(15㎏) 어치 소고기를 구입했다는 A씨 카드 내역까지 확인해 기소했다.

A씨가 B씨의 업무처리로 손해를 본 데 불만을 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고소한 점을 감안하면 주지도 않은 150만원 어치의 소고기를 줬다고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던 점 등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육점 주인도 '소고기 3㎏씩 아이스박스(가로 45㎝·세로 30㎝·높이 15㎝) 5개에 나눠 포장했다'고 해 A씨 진술과 부합하는 듯 했다.

하지만 B씨는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 단짜리 사과박스 분량의 소고기'와 '누룽지 한 봉지'만 받았다고 했다. '사회상규에 비춰 의례상 대가'로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게 B씨측 주장이었다.

1심 법원은 해당 물건을 배달한 퀵 서비스 기사의 진술에 주목했다. 택배 기사는 당시 법정에 비치된 티슈케이스(높이 12㎝)를 활용, '소고기 박스는 티슈케이스보다 2배 이상 높아 고기양이 많다고 생각했다, 누룽지는 부피가 큰 봉지에 들어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소고기 3㎏가 든 아이스박스는 무게 5.5㎏짜리인데, 산술적으로 5개를 한 번에 쌓으면 높이 75㎝, 무게도 27.5㎏에 이른다는 계산이 가능했다. '혼자 들 수 있는 정도의 무게였다'는 택배기사 진술까지 더하면 퀵서비스로 배달된 물품과 정육점이 배송한 소고기 총량과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원심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주문한 소고기를 정육점 등에서 직접 B씨에게 배달토록 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아파트까지 가져 올라갔다가 다시 싣고 내려와 배달기사에게 전달한 점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31만원 어치의 소고기와 누룽지를 제공한 혐의만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직무 관련해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B씨에게 유죄(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및 벌금 100만원, 31만원 추징)를 선고했다.

A씨는 50만원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절도 덮어주고 피의자에 돈 빌린 경찰 항소…법원 "원심대로"

절도 사건을 덮어주고 피의자에게 돈을 빌린 경찰관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벌금 5만원과 추징금 3만4931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동일한 형량에 벌금 30만원, 추징금 19만4917원을 선고했었다.

검찰은 애초 빌린 돈 500만원의 이자를 A씨가 부담하던 이자율(연 27.9%)을 적용해 뇌물 액수를 계산했으나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연 5%)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추징금 액수가 바뀌었다.

A씨는 목포경찰서에서 근무하다 2018년 절도 사건 피의자인 B씨에게 500만원을 빌린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경찰 내사 처리규칙에 따라 입건 후 송치 의견을 정해 검찰에 관련 기록을 보내야 한다. A씨는 그러나 B씨를 입건 전 단계인 내사 단계로 되돌리는가 하면, 수사 과정에서도 관련 수사를 미루거나 방치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요구해 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렸고 해당 사건도 부정하게 처리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동료 살해 월북 시도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징역 20년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뒤 월북을 시도한 스리랑카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살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 A(2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진도군 숙소에서 같은 국적 피해자 B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숙소에서 생활하던 B씨는 평소 A씨가 문을 제대로 닫고 다니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하거나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강원 철원까지 달아나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울타리를 넘어 월북을 시도했다가 군 관계자들에 붙잡혔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A씨는 북한을 거쳐 중국으로 넘어가려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자동차,중기]					
2020타경 5328	1	사용본거지: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길 14-76 [외치리] 등록번호:전남04마4467 기종:지게차 연식:2013 주행시간:4,807.7시간	건설기계	8,500,000 8,500,000	보관장소:전남무안군일로읍문화로627[지장리535]
2020타경 55620	1	사용본거지: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82번길31, 106동 1706호[남악리,근화베아채] 등록번호:41아0707 차명:카니발 연식:2017 [사용연료:경유,주행거리92,796킬로미터]	자동차	22,000,000 22,000,000	보관장소:전남무안군일로읍지장리535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1. 2. 22.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1. 2. 26. [금]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1.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공정배